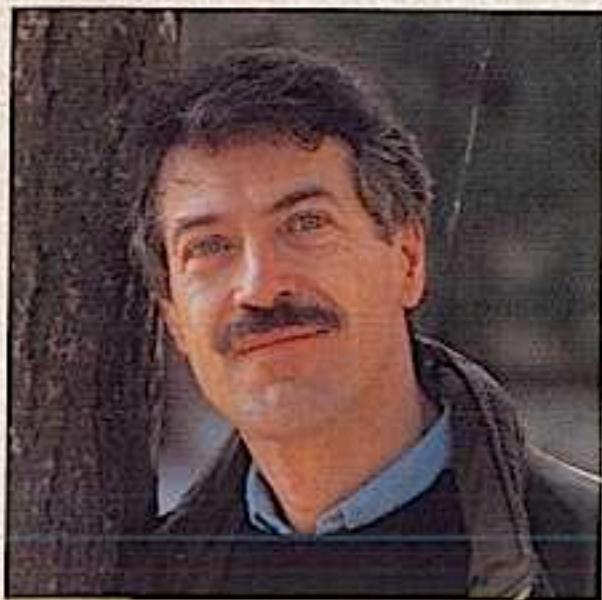


강대국 양보로 제3세계 살려야



알랑 리피에츠

1947년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68년 국립기술공과대학을 졸업한뒤

71년 국립토목학교를 마쳤다.

73년 이래 정부기관인 수리경제계획예측연구소 (CEPREMAP)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88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녹색당의 대표로 출마하는 등

현실정치에도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기와 인플레이션〉(자본과 자본의 공간)

〈기적과 환상〉(과감한 선택)등이 있다.

한 나라의 환경과 사회 분야
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각
국민의 몫이다. 그동안 나는

프랑스와 선진국에 대해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 해왔다. 이 안이 그대로 한국에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대신 세계의 모든 민주 세력들이 합의 해야 되는 점이 하나 있다. 바로 각 나라가 고유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국제질서의 결정이다.

오늘날 자유무역주의의 커다란 문제점은 '조정' (무역 수지와 자본 유동의 균형 회복) 비용을 적자국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나라들은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 성장이 철저하게 필요한 나라들이다. 이러한 상황은 누적된 외채라는 점 때문에 더욱 악화된

다. 체무국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외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무역 흑자를 달성해야 한다. 외채는 그러나 이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상환하면 할수록 더욱 가중되는 법이다. 그래서 일본과 독일 다음으로 세번째 수출대국인 브라질마저 상환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다. 광적인 수출정책 탓으로 최악의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으며, 농주린 농민과 판자촌 주민의 생활수준, 복지는 조금도 향상되지 않는다. 환경에도 신경을 쓸 여유가 전혀 없다. 한국은 지금까지 잘 대처해왔지만 통일이 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다.

제3세계 외채의 탕감

미래의 생산에 대해 채권국들이 축적하고 있는 엄청난 권리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제3세계와 미국)이 성장 억제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세계 경제의 침체를 지속시켜 외채 상환을 불가능하게 한다. 한마디로, '상환 폭탄'이 '외채 폭탄' 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아니라 거시경제학의 논리에서도 1930년대처럼 채권의 최대한 평가절하, 바꿔 말해 외채를 가능한 한 탕감하는 조치가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탕감은 이미 폭넓게 시작됐지만 일련의 문제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제3세계에 대한 채권의 신속한 평가절하는 '최후의 대여자'로서 기능하는 초국가적인 통화기구가 은행포기분의 채권에 대해 보상을 해주어야만 가능하다. 바로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과 같이 국제기구가 발행하는 신용통화를 검토할 만한 것이다.

오늘의 국제상황은 새로운 '브레튼우드협정' (1944년 미국의 브레튼 우드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개발은행이 창설됨)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국제기구에 독자적인 이유로 통화를 발행할 권리를 부여한다면 엄청난 장벽이 제거될 것이다. 이러한 특별인출권은 우선 상환되지도 않고, 부도가 난 제3세계의 외채에 대한 보상으로 은행에 제공된다. 그 다음 세계 인구의 발전 필요 정도에 따라서 해마다 분배한다. 나아가 수많은 제3세계 국가들의 주소득원인 원자재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재고 자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처럼 '새로운 브레튼우드협정'은 제3세계의 외채,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제3세계 원조 재원, 전세계적인 이자율의 안정화와 인하라는 네 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외채가 탕감되고 과거가 청산된다. 수출 위주의 생산제일주의가 아닌 다른 발전 모델의 가능성성이 열린다. 그러나 여전히 가능성에 불과하다. 북반구나 남반구의 어떤 나라가 수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 산업의 노동자와 농민들을 쥐어짜서 상류층의 수입상품 구매력을 계속 지원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찬값으로 세계 시장에 방출된 제품들이 다른 나라들에 다시 규범을 강요하게 된다. 자유무역과 유연한 내부 모델을 양립시킬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보호무역이 국가 발전 모델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 한 나라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바람직한' 내부 타협을 이끌어낸다면, 만약 그 타협에 의해 공동체의 필요와 그 구성원들의 욕구가 잘 조화된다면 자유무역이라는 자의적인 규칙에 얹매일 이유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보호무역에는 상당히 심각한 단점들이 있다. 새로운 제조 방식과 새로운 제품의 보급이 억제되기 마련이다. 나아가 새로운 것들이 모두 환경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 또 대량 생산에 바탕한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해져 휴식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난 공해를 유발하는데 따라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나라마다 중복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자유무역에 대한 사회적 합의

더구나 오늘날의 세계 무역전쟁에서는 보호무역의 모든 장점들이 사라져버리고 각국의 수출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역수지의 균형을 이루려면 국내의 노동 비용을 절감해서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소비와 수입을 동시에 억제해야 된다. 이러한 '저임금주의 보호무역주의'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당연히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자유무역의 규칙을 조정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집단간의 협정과 사회적 입법을 통해 노동자 취취에 근거하는 기업들 사이의 경쟁을 억

제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런 원칙을 조금씩 통용하게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강대국 사이에서는 이 성과 역학 관계의 문제이지만 제3세계에 대해서는 벌써 극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북반구 국가들은 남반구 국가들을 헤어나올 길이 없는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우선 외채를 상환하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외채를 상환하려면 무역에서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함으로써 흑자를 내야만 한다. 그러나 남반구의 수출 공세 때문에 자국의 농민과 산업이 파산할 위험에 직면한 북반구 국가들은 바로 자기 채무국들에 대해 보호무역을 선언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것이 소위 '북반구 신중상주의'의 모순이다. 1960년대 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남반구의 값싼 제품을 크게 환영했다. 그래서 좌파에서는 이

것을 '제3세계에 대한 약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북반구는 자국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내세우고 '남반구 약탈하기'를 사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적어도 한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다. '북반구' 심지어 '북반구의 자본주의' 마저 통일된 진영도 아니고 합리적이고 마키아벨리적으로 행동할 능력도 없다는 점이다. 북반구의 모든 사회계층이 모호하고 지리멸렬하기 짝이 없는 집단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금융자본주의로서 북반구는 외채 상환을 위한 남반구의 수출에 찬성하지만, 산업이나 농업자본주의로서의 북반구는 남반구의 도전에 반대한다. 봉급 생활자로서의 북반구 노동자들은 남반구 노동자들과의 경쟁을 두려워하지만, 소비자로서 그들은 남반구의 수출이 제공하는 샌값의 의류와 비디오 녹화기와 전자레인지를 환영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 또는 노조 운동가들은 '제3세계에 대한 약탈'에 반대하면서도 남반구의 고용을 위협한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현실이다. 개인적으로 남반구의 노조 운동가, 노동자, 농민들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다음에야, 남반구의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을 억압하는 끔찍한 수출 모델보다는 북반구의 보호무역이 낫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남반구 국가들이 외채 상환의 속박에서 해방된다면 국내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 전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북반구의 기업주들은



외채상환-제3세계 국가들은 외채부담 때문에 국민의 복지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남반구의 압박에서 벗어난다면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절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상품이 더 비싸진다고? 그러나 타이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열매를 소비할 자유가 북반구의 실업자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두가지 규칙이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채무국에 수출의 일부로 외채 상환을 대신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반구의 불법적인 보호무역은 자동적으로 상환거부라는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그 대신 자유무역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강제해야 한다. 그러면 노조권의 탈살과 독립적인 노동운동의 탄압에 의해 노동자들을 착취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려는 나라들은 배척될 것이다. 이 사회적 합의들은 단순히 '남반구'에 대해서 '북반구'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적인 남반구 국가들을 비민주적인 국가들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의 관건은 '노동자들의 권리'의 준수를 누가 판정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제네바의 국제 노동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만이 그러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추상적인 '경기 규칙'에 북반구와 남반구 국가들 사이의 협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 협정은 역동적인 상호 보완성에 근거하고 기술 이전의 촉진과 함께 균형잡힌 교역, 즉 공동발전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안한 모든 개혁의 목표는 각 국민과 국가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고유의 선택에 따라서 가능한 한 진보적인 발전 모델을 선택할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즉 남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남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의 발전 모델을 선택하는 자유라는 이 원칙은 적어도 한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지구 전체에 관련되는 환경 문제가 그것이다.

지구 환경의 수호

지구의 환경 안전은 두말 할 나위없이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따라서 인류공동의 유산이 남용되는 것을 금지할 권한이 있는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 기구는 강력한 조사와 평가 수단을 확보하고 모든 정부로부터 독립해서,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는 헤이그의 국제재판소나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에 고발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고유의 자원을 사용

할 자유를 침해당한 몇몇 나라들에(공공 목적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동결할 때 보상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될 것이다. 그런 재원은 몇몇 공해유발 제품의 소비나 사용에 대한 세금에서 양출될 수 있다. 예컨대 석유 가격의 인상으로 전세계가 에너지 절약이라는 전전한 정책을 강화하게 되었지만, 현재의 저유가 상황이 계속된다면 태만해질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특별 연료에 의해 환경 기구의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용자들의 위험한 낭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기구가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기구, 발전위원회들과 함께 범세계적 차원에서 재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면, 온실 효과를 예방하고 오존층을 보전하는 에너지 절약 기술을 남반구에 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자유와 미래 세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좀더 조직적인 국제 경제질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1

리피에츠 교수의 창간 축하글

〈한겨레21〉 창간호에 기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한겨레21〉의 대성공과 함께 국민의 평화와, 통일,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환경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발전 모델의 정립을 향하여 전진하길 바란다.